



제 429국회 (정기회)
제 3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무화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75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내외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무화	3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등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5.

3. 회 부 일 :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 및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의 대학교가 국내외의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내외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내외의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3(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재정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른 국내외의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해외 석학이나 글로벌 인재는 세계 최첨단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영입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과 혁신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특히 교육·연구 현장에서 신기술 분야 인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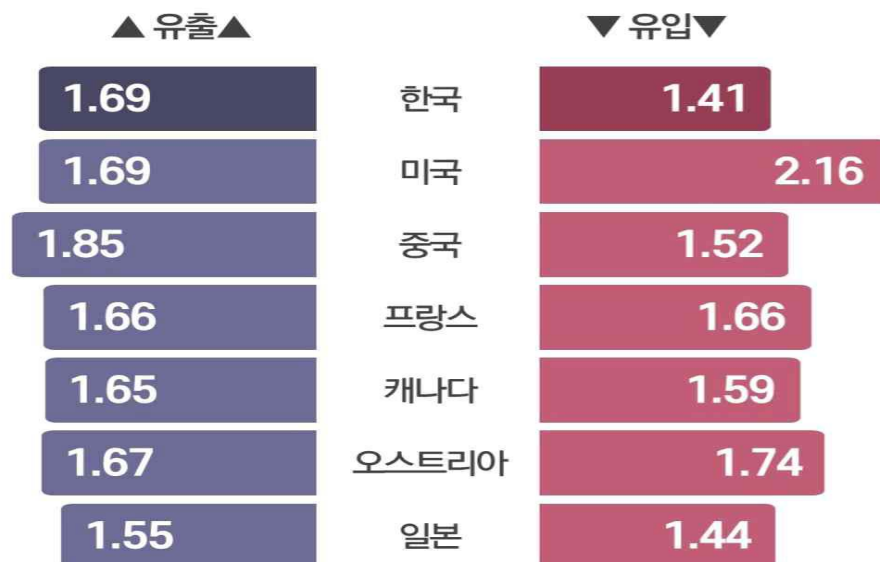
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오,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서 원천 기술 개발과 첨단 연구를 선도하며, 국내 인력과의 협업을 통
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해외 인재 유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산업 구조 고도화, 노동 생산성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증대에 직접적으
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해
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유입·유출 인재 기여도
를 살펴보면, 유출되는 연구자의 질적 수준이 유입되는 연구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유출 : 1.69 > 유입 : 1.41)되고 있음.

[국가별 유출·유입 인재의 기여도(2022)]

(단위: 점)



주. 기여도는 Scimago Journal Rank(SJR) 2022 점수를 기반으로 측정²⁾

자료 : OECD(2024), 「OECD Bibliometric indicators 2024 edition highlights」

1) 대한상공회의소,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2025.8.13.

2) SCImago Journal Rank(SJR) 지수는 학술 저널의 영향력과 권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또한, 매년 약 3만명의 이공계 학생(학부, 석·박사)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³⁾ 특히 지난 5년간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로 이직하는 등 교수급 인재의 해외 이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⁴⁾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와 더불어 정주여건 확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외의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인적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 해외 각국은 기술 주권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과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그 취지가 있음.

- 참고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연간 2억 달러, 양자 R&D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연간 1.5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상위 연구자의 해외 공동연구 지원을 위해 2022년 11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음.

3) 이공계 학생 유출 현황(대한상공회의소) : ('21) 2.8만명 → ('22) 3.2만명 → ('23) 2.9만명
[참고 1] AI 인재 이동 지수

4)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1년~'25년 5월 기준) 서울대 교수 56명(인문사회 28명, 이공학 24명, 기타 4명)이 해외로 이직하였음.

[해외 각국의 핵심인재 양성·확보 전략]

구 분	주요 내용
미국	○ 반도체 인력양성 2억 달러, 양자 R&D 및 인력양성 연간 1.5억 달러 투자 ○ 초당적 「Keep STEM Talent Act」 발의('23) ○ Quad(미·일·호·인) Fellowship('23)
일본	○ '양자 + 타 분야' 융합인재 육성('22) ○ 최상위 연구자의 해외 공동연구 지원('22년 110억 엔) ○ 해외인재 유치·자금 액션플랜 발표('23)
중국	○ 청년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강화에 관한 조치 발표('23.8) ○ 청년 엘리트 인재 국제교류 지원 (年 200명) ○ 국가자연과학재단(NSFC) '젊은 국제 우수학자 인재 초청' 프로그램 출범('23)

자료 : 김인자(2024), 「글로벌 인재 허브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K-Tech Pass 사업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에 종사 예정인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정책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국내외의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면에서 구분된다고 보여짐.

[다른 부처의 해외인재 유치 지원 정책 현황]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K-Tech Pass	Brain Pool(+)
지원단위		개인	개인 또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대상		(’25.4월 신규시행) 00명 ※ (목표) ’30년까지 첨단산업 우수인재 1,000명 확보	○ Brain Pool: 257개 과제 내외 ○ Brain Pool+: 19개 과제 내외
예산		-	(’25 요구) 38,817백만원
지원대상		국내 첨단산업 기업에 종사 예정인 우수 해외인재 ※ 요건 : 세계 100대 공대 석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출신 8년 이상 경력, 1인당 GNI 3배 이상(타월한 기술·역량 보유시 요건 면제)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지원 내용	재정	-	인건비(월 최소 5백만~최대 25백만) 연구활동비(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연구장려금 등)
	비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게 특별비자(F-2) 발급	-
	조세 감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학교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자녀학비
	대출	전세대출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
	기타	행정컨시어지* 서비스 ※ 공항 입국지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신서비스 개설 등	-

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함.

□ 다만, 개정안은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두어 정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개정안은 지원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국내·외 우수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영입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를 한정하는 것은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재정의 활용처를 다소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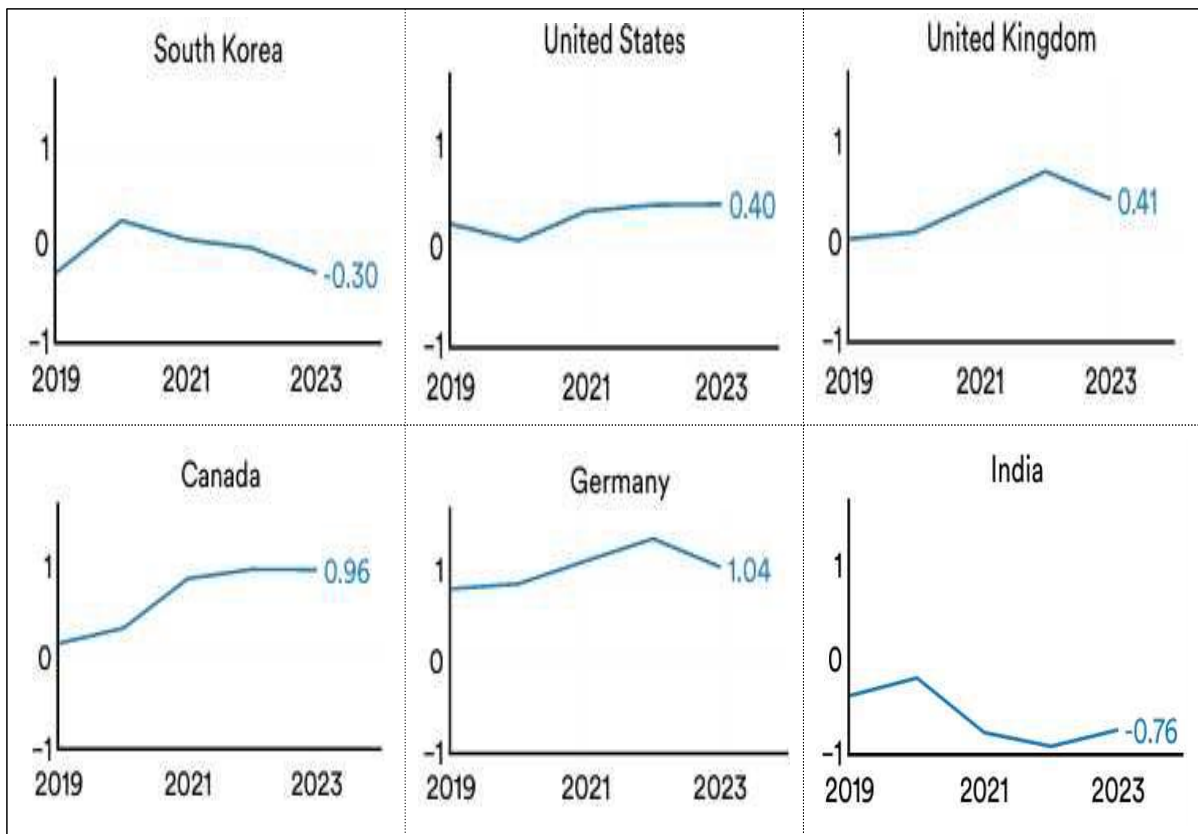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1

AI 인재 이동 지수

□ 최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AI인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을 고점으로 2023년 기준 AI 업계 종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AI인재 이동지수<0)을 보이고 있음.

[AI 인재 이동 지수(2023)]



주 1. 수치는 링크트인(LinkedIn)에 등록된 1만명당 AI 인재 이동 지표를 뜻함.

2. y축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순유입이, -1에 가까울수록 순유출이 발생함을 의미함.

자료 : Stanford HAI(2024), 「The AI Index 2024 Annual Report」